



대전광역시 동물복지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

이형복 지속가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1. 들어가면서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또한 각종 동물복지와 동물학대 등의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전시는 민선 8기에 들어서며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6개의 동물 관련 국정과제에 맞춰 4개의 반려동물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했다. 이처럼 정책적 변화와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대전시의 동물복지 및 학대 등의 실태를 검토하고, 시민의식 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대전시가 선진적으로 나아가야 할 동물복지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 제시와 추진전략·세부 과제(단위과제) 제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양육비용(병원비 포함)은 수도권 19.85만원, 수도권 외 동지역 15.75만원, 수도권 외 읍면지역 12.63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려견에 대한 연령별 평균 양육비용은 20대 22.16만원, 30대 18.93만원, 40대 18.81만원, 50대 13.44만원, 60대 이상 12.56만원으로, 20대의 평균 양육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 반려동물 양육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에는 13%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개(강아지) 71%, 고양이 20% 순으로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2022년 11월말 대전시에 등록된 동물은 100,586마리이며, 동구 15,360마리 / 중구 17,557마리 / 서구 33,902마리 / 유성구 21,214마리 / 대덕구 12,553마리가 구별로 등록되어 있다. 올 한해만도 약 9,000마리가 등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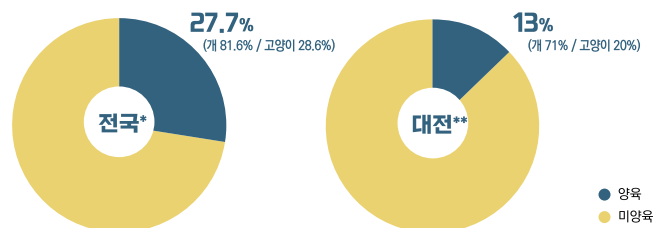
2. 동물양육·학대·보호 현황

● 동물양육

농림축산식품부의 보고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추정 시 전체 가구 2,304만 가구 중 약 638만 가구에서 반려동물 860만 마리를 키우고 있으며, 2019년(591만 가구)보다 47만 가구가 증가하였다. 반려동물의 종류별 양육 비중을 살펴보면, 개(강아지)는 2019년에는 83.9%, 2020년에는 81.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양이는 2019년에는 32.8%, 2020년에는 28.6%로 나타났다.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성별 반려동물양육 현황(경험포함)은 남성의 82.1%, 여성의 81%가 개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양육 현황은 20대(77.7%), 30대(85%), 40대(81.6%), 50대(80.5%), 60대(84.3%) 전 연령 모두에서 개를 가장 많이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가 개를 가장 많이 양육하고 있고, 고양이의 경우에는 20대가 가장 많이 양육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규모별로 반려견에 대한 월평균

그림 1. 전국·대전 반려동물 양육가구 현황(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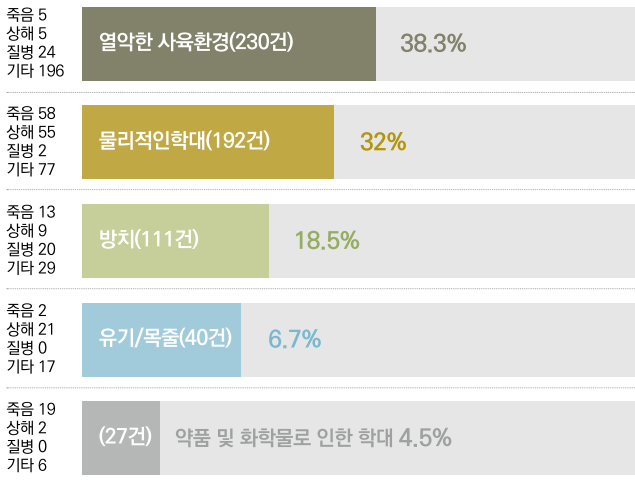
** 통계청 인구총조사(2020년) 가구부문-반려동물보유형태가구:대전광역시

● 동물학대

2020년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은 전국적으로 총 992건 발생하였고, 1,014명 검거됐다. 이는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위반 사건 및 검거 인원은 각각 8.5%, 5.5% 증가한 수치로, 지난 2010년(위반사범은 78명) 이래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의 절반도 안 되는 인원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절반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구속된 인원은 10년간 4명에 불과하다. 2020년에 검거된 연령별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은 50대(51~60세)가 19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1년 동안 동물보호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연령대 또한 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줄곧 한 자릿수였던 19세 미만의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2020년에는 두 자릿수(14명)로 늘어났으며, 20대와 30대 동물보호법 위반 사범이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청년들의 반려동물양육이 증가함과 동시에 반대급부로 동물을 학대, 유기, 상습 파양하는 일 또한 많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동물자유연대가 보고한 2019년 동물학대 유형 통계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이 열악한 사육환경에 의한 학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물리적 학대, 방치, 유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동물학대의 유형(2019년 동물자유연대 보고)



최근에는 자신의 사육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많은 수의 동물을 수집하듯 사육하는 '애니멀 호당'이 증가하고 있다. 애니멀 호당은 반려 목적을 넘어서 단순히 동물을 '수집'하는 것에 집착하는 일종의 강박증상으로,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작정 동물을 양육하여 열악한 환경에 방임하는 일종의 학대행위이다.

● 동물보호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실·유기 동물보호형태 전국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에는 총 29,620마리의 유실·유기 동물이 안락사했으며, 2020년에는 총 130,401마리의 유실·유기 동물 중 27,062마리(20.8%)가 안락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29.6%(38,595마리)의 유실·유기 동물이 분양됐으며 25.1%(32,674마리)의 유실·유기 동물이 자연사했고 11.4%(14,841마리)가 가족에게 인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유실·유기 동물을 가장 많이 구조·보호한 지역은 경기도 27,181마리(20.8%)/경남 13,699마리(10.5%)/경북 9,645마리(7.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6대 광역시 중 유실·유기 동물을 가장 적게 구조·보호했는데, 이는 타 광역시에 비해 대전시가 유실·유기 동물이 적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대전시(3,214마리, 전국 2.5%)는 유기·유실동물

중 강아지 비율이 57.1%로 고양이 40.1%에 비해 높았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운영 중인 동물보호센터는 280개소이며 동물보호센터의 운영형태를 살펴보면 민간위탁(위탁보호, 228개소), 지자체 직영(47개소), 시설위탁(5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 경우는 비록 1개소가 시의 직영으로 운영(인력은 25명)되고 있으나 금고동의 대전반려동물공원 내에 있는 대전동물보호센터는 규모·운영 형태와 운영방침이 타 시도로부터 모범사례로 인식되고 있다.

표 1. 대전반려동물공원 운영방침

운영방침
1. 반려동물공원을 반려인들과 반려동물이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
2. 시민 갈등 해소를 위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는 공간
3. 기간제근로자 다수를 인근 마을주민으로 채용 → 반려인과 반려동물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인근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공간

3. 시민의식조사

대전시 동물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제언을 목표로, 현재 대전시민이 생각하고 있는 동물보호 및 학대 관련 정책에 관한 의식을 조사하여 정책·제도 반영을 위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조사의 모집단은 대전의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327명(10대 0.3%, 20대 15.9%, 30대 46.2%, 40대 26%, 50대 7.6%, 60대 이상 4%)이 응답하였다.

1) 동물양육 및 교육현황

응답자의 64.2%(210명)가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26.6%(87명)이 현재에는 키우지 않지만, 과거에 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아지 51.9%, 고양이 29.3%, 소동물(햄스터, 기니피그 등) 5.9%, 어류 3.8%, 파충류 3.3% 등의 순으로 양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물학대에 대한 교육부분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4.9%(245명)으로 다수를 차지하여 높은 비율을 보였다.

2) 동물학대에 관한 인식

동물학대 목격 후 신고여부는 긍정 응답률이 매우 그렇다 47.1%(154명), 그렇다 38.2%(125명)로 약 85.3%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다. 동물학대 가해자 처벌여부 강화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률은 86%(281명)으로 가해자 처벌의 강화를 동의하고 있다. 동물학대 가해자가 향후 사람에게 범죄를 행할 가능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 48.6%(159명), 그렇다 34.9%(114명)로 나왔고, 학교에서 동물학대 교육 시행 여부도 긍정 응답률이 매우 그렇다 55%(180명), 그렇다 30.9%(101명)로 교육의 필요성을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다.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사건 담당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40.4%(132명), 그렇다 32.4%(106명)로 약 72.8%가 경찰의 개입을 요구했다.

3) 동물보호 활동에 관한 인식

학대받은 동물보호·치료 전담기관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39.4%(129명), 그렇다 41.6%(136명)로 전담기관 설치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유기동물 입양 여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 27.2%(89명), 그렇다 39.8%(130명)로 상황이 가능하면 입양의사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동물복지를 위한 동물보호 단체 금전기부 의향 여부에서는 약 48%가 기부 의사를 보였다. 동물복지 정책 비용 마련을 위한 세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다 41.9%(137명), 매우 그렇다 31.2%(102명)으로 긍정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4) 대전시 동물정책에 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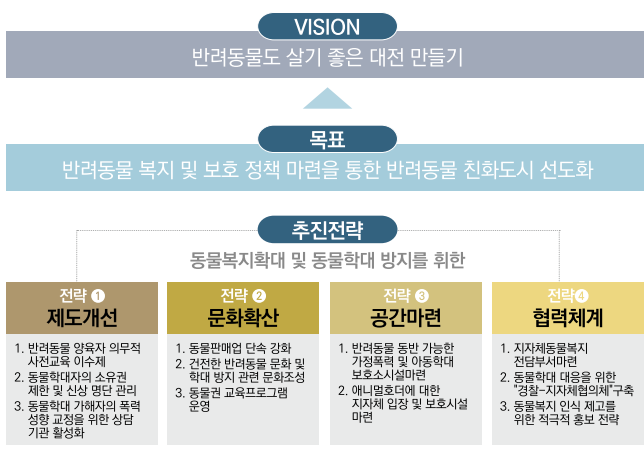
대전시 반려동물 관련 기반시설과 교육프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하였는데 기반시설(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공원 등)에 대해 51.4%가 만족하고 있고, 교육프로그램(반려견 에티켓 교육 등)에 대해서는 만족 79.2%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대전시 교육프로그램의 우수성을 인지할 수 있었다. 대전시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와 대전시 반려동물 공원 인지도에 대해서는 동물보호센터가 41.6%와 반려동물공원이 34.9%로 다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인지하였다.

대전시 동물복지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들을 중요도 순으로 조사하였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강화 40.4%(132명),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동물의료보험 적용, 20.2%(38명), 동물판매업 관리강화' 15.6%(5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 대전시 동물복지 확대 기본구상

대전시 동물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은 인간과 동물이 함께 조화하며 안전하게 살아가는 대전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과 대전시민, 지역 내 동물보호단체 등의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동물을 보호하고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해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 향후 대전시가 반려동물 문화교류의 선진도시가 됨과 더불어 동물복지 정책의 선도화를 통해 반려동물이 살기 좋은 도시로의 조성을 목표로 두어야 한다.

그림 3. 대전시 동물복지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



대전시 동물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세부과제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높아진 시민의식과 정책수요의 수준에 발맞춰 동물복지 확대 및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전략을 제시한다.

- ① 반려동물 양육자 의무적 사전교육 이수제 추진
- ②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제한 및 신상 명단 관리방안 마련
- ③ 동물학대 가해자의 폭력성향 교정을 위한 상담기관 활성화방안 마련

둘째,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제고함으로써 동물과 함께 살기 좋은 대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동물복지 확대 및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문화확산 전략을 제시한다.

- ① 동물판매업 단속강화
- ②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및 학대방지 관련 문화조성
- ③ 동물권 교육프로그램 운영

셋째,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와 동물을 위해 복지와 보호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보호를 위해 공간을 마련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 ① 반려동물 동반 가능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보호소 시설 마련
- ② 애니멀호더에 대한 지자체 입장 및 보호시설 마련

넷째, 지자체와 경찰 등의 업무추진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동물학대에 대응하고 동물복지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적 측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 ① 지자체 동물복지 전담부서 마련
- ② 동물학대 대응을 위한 “경찰-지자체 협의체” 마련
- ③ 동물복지 인식제고를 위한 적극적 홍보전략

5. 나오면서

본 연구에서는 대전시의 동물복지 및 학대 등의 실태와 시책 현황을 검토하고, 시민의식 조사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대전시가 선진적으로 나아가야 할 동물복지 정책을 위해서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4개와 세부과제(단위과제) 11개를 제안하였다.

모한다스 간디는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능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사람을 넘어 미물이라 칭하는 동물의 복지를 이야기한다. 일각에서는 사람의 복지도 다루지 못하는데 미물인 동물에게까지 헛돈을 쓰는 것은 낭비라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물까지 복지를 논하는 국가는 인권에 관해서도 당연히 선진적이다. 결국 동물에 대한 배려는 인간에 대한 배려와 함께한다고 볼 수 있다.

※ 본 내용은 이형복(2022), 『대전시 동물복지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 : 동물학대를 중심으로』, 대전세종연구원 정책과제를 토대로 정리한 것임

